

돈봉투 받은 민주 의원 '20명' 특정... 수사 속도나나

檢, 송영길 前보좌관 영장에 명시...민주 "각종 악재 몰타기 안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20명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돈 봉투 명단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도 3~4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21년 4월 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

실에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며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이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공소장 등에서 '봉투 20개' 등으로 표현된 것이 의원 숫자로 진전된 것이다.

검찰은 그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주요 관계자 조사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사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교차 검증했다. 지난 10일에도 국회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통해 현역 의원들과 보좌진의 동선

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한 박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에 소환되는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대응고 반발하는 것도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와 관련,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숫자를 명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이 진행한 '폭염 대

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추측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는 드러난 바가 없는 것으로 지회는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총선 지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핵심 관계자는 "지금 거론되는 명단은 정

치권에 나도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민심이 보다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민주당 차원의 정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만으로 정치적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면서 여권이 전대 돈 봉투 사건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몰타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원칙에 따라 정당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통큰 결단을”

중기중앙회 간담회...안도걸 경제연구소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는 11일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큰 결단을 내리고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주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과 통합이 전 방안, 이전 대상지에 대한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통큰 결단과 합의가 없으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 이용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볼 때 공급 과잉과 신규 공항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이사는 “2029~2030년 개통 예정인 타 경쟁 공항에 비해 군 공항 이전 입지도 결정 못 하면, 서남권 중추공항은 후발주자로 밀려나 사업계

획과 투자 규모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흡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안 이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을 전제로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으며 이주자 생계 지원, 생활안전 지원, 예타 면제 등 상세 내용이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 특별법은 국방부가 주관부처로 군 공항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은 없고 용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별도 상세 지원 규정이 없어 시행령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놓여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토부 참여, 이전 부지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부자감세로 중부세 세수 결손 5000억”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대비 2조4000억 원 정도 감소하고, 정부 세입예산에서 중부세 세수 결손이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나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의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80%) 보류로 인해, 올해 중부세는 징수세액 기준으로 5조 2000억원이 예상되며,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4조 3000

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징수세액과 결정세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부세의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 매년 부과액 중 30%가량이 다음 연도에 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형석 의원은 “부자감세 여파로 중부세가 작년 대비 2조 400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며, 5000억 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피해자 저리대출 요건 완화”

전세사기 후속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두 달째를 맞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후속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은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공시가격 검증 강화를 통한 허위 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할 건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은 명백한 정부 실책”이라며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